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3-6호

발행일: 2023. 7. 4. (화)

제407회 국회(임시회, 2023. 6. 1. ~ 2023. 6. 30.)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은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 차

1. 개관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가. 규제혁신

나.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1. 개관

제407회 국회(임시회)는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으며, 6월 21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모두 25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07회 국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가능케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 불법개설 약국에 대해 실태조사 후 위반사항을 공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경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07회 국회의 2023년 6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5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국회운영위원회(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운영위원장
2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 등 10인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의원 등 11인
4	법제사법위원회(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0인
9	정무위원회(1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등 10인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 의원 등 10인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19		국방위원회(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행정안전위원회(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의원 등 10인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4		보건복지위원회(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1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규제혁신, 스톱킹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이슈를 다룹니다.

2. 주요 법정책 이슈

가. 규제혁신

개요

규제혁신이란 보통 정부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해하는 법령이나 지침 등을 수정토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규제혁신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어 1998년 3월 1일 시행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또한 규제혁신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 내 규제조정실이 규제혁신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인력 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의 활력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심판부,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새로운 규제혁신 체계를 정비하고 덩어리 규제, 신산업규제, 규제 품질관리 등을 기본 추진전략으로 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그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최근 규제재검토 제도, 규제샌드박스 제도,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을 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21일 본회의에서는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정무위원회	<p><u>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현행법은 과도한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규제가 계속 유지되지 않도록 하여 규제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몰기한이 경과하는 경우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는 효력상실형 규제일몰제와 더불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재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제도의 도입 후 재검토 규제는 많아졌지만, 재검토기한 도래 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규제에 대한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보다 재검토 규제로서 존속시키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내 규제재검토 실시조직(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재검토 시 재검토결과서를 작성·보관·공개하여 후속으로 이루어질 재검토에 활용될 수</p>	2023-06-21 (원안가결)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p>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위원회 상정 기간, 규제 특례 부여가 거부된 신청인의 재심의 신청 권한 및 규제 특례를 부여받은 자의 사정변경에 따른 규제 특례 내용·조건 등의 변경 등 규제샌드박스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서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미비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등 국가표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의 신설·강화 시 그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존규제의 폐지·완화 대상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 및 규제심사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국조실)

과제목표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롭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조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쉐 과정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밀착 관리

주요 내용

(규제혁신 추진체계 재설계)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등 핵심과제를 신속히 해결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 민간전문가 총원, 규제영향분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규제혁신 절차 전반의 전문성 제고

(민간 주도의 규제혁신 추진기반 구축) 민·관·연 합동 ‘(가칭)규제혁신 추진단’ 구성, 덩어리 규제 집중발굴 및 개선 추진

- 기업활동·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중립적인 시각에서 심판하는 ‘규제심판제도’ 신설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

-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를 전면 재설계하고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추진

(스마트 규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규제행정 전 과정 혁신

(규제비용 감축) ‘원인 투자아웃(One In, Two Out)’ 룰 도입,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 기업·국민 부담 완화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이다.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등의 다양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보완 과제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실효성 확보, 추가 입법을 통한 제도적 안정성 제고,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하였다.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설계와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22-18 2022. 12. 31.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과 갈등관리시스템의 통합 모델을 구축하여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의 확산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각 장(章)에서 분석하여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개혁 추진 단계별로 차별화된 갈등관리전략을 강구하고 규제정책 관련 갈등의 건설적인 해소와 조정을 위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산업 분야별 규제혁신 수요 조사 · 분석 -비대면 산업 규제이슈 조사 ·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21-21-4 2021. 11. 30.

이 연구는 비대면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규제 장애 및 지체가 발생하는 지점을 제시하고자 함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한국개발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20-12 2020. 12. 31.

본 연구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된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영 성과와 기존 금융기관의 혁신금융서비스 실적 고찰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고, 법적인 측면을 심층분석함으로써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나. 스토킹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개요

2018년 시작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뿌리 깊은 권력형 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다양한 유형의 젠더폭력이 사회문제로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23년 1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스토킹행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9월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스토킹범죄는 감금 ·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스토킹행위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1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이슈](#) 참조).

2023년 6월 21일 본회의에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하고, 잠정조치의 유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도입하는 등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p><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2021. 10. 21. 현행법이 시행되었으나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p>	2023-06-21 (원안가결)
2		<p><u>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u></p> <p>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대상에 스토킹범죄자를 추가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위한 구체적 집행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p>	2023-06-21 (원안가결)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무부·여가부·금융위)

과제목표

권력형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흉악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실현
홍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주요 내용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 구축)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 지원 및 양형기준 강화,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 구축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중형선고와 결합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제 추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및 주취범죄 엄정대응)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하여 촉법

[120대 국정과제]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법무부·방통위·여가부)

과제목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

주요 내용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 구축)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신변 보호부터 법률 지원·경제적지원·일상회복까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지원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강화)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 구축 등 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법무부·방통위·여가부 등 협업 강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

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 지원,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주취감경 폐지 검토

(무고·위증·사기 등 거짓말범죄 피해자 특별 구제책 마련)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 및 무고 등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디지털플랫폼 이용 신종 사기 적극 대응 및 피해자 구제 강화

(서민·소상공인 올리는 경제범죄 엄단) 부처 간 협업으로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 추진

련) 현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증거보전 법제화 추진, 아동·청소년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 구축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산재된 법률구조 기구들을 총괄·관리하여 연계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 및 범위 재조정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법무부, 2022. 7. 26.)

스토킹 피해자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제출

- 전자장치 부착할 수 있는 특정 범죄(살인·성폭력·미성년자 유괴·강도)에 “스토킹범죄” 추가
- 준수사항으로 “피해자 등 특정한 접근금지” 필요적 부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 지자체 CCTV와 전자감독시스템 연계로 관리감독 효과성 제고
- 신속수사팀 설치 기관 확대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위험대상자 맞춤형 관리체계 확립
- 신속대응 필요 시 주거지 출입 가능토록 「전자장치부착법」 개정 추진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참고 자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양정숙 의원안: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또는 취소시 통지규정 신설 2021. 9.

김상희 의원안: 스토킹행위의 행위유형에 정보통신망 이용 개인정보 배포·게시행위 추가 2021. 9.

남인순 의원안: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 및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등 2021. 9.

정청래 의원안: 범치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 신설 2021. 1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2. 11.
민형배 의원안 등: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소위 “스토킹 범죄” 포함 등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보도자료

[스토킹범죄자 전자감독 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제도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1. 5. 13.

지난 4월 20일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스톱킹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처벌법에는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1) 신변안전조치와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 2) 피해자 정보보호의 강화,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4) 피해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 지원 등의 방안 마련, 5) 스톱킹 피해자 보호법 마련 등의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스토킹처벌법 개선방안 및 경찰의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2-AB-04 2023. 3. 24.

스토킹 관련 현안은 이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 현안 등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스톱킹 관련 많은 쟁점들 중에서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해 논의되어야 할 핵심적인 영역을 1) 스톱킹처벌법 개정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경찰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현실적인 문제와 해결방안, 3) 피해자 지원 관련 시급한 현안 등 총 3가지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계획했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남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2022. 12. 30.

‘스토킹처벌법’에 스톱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톱킹 가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음에도 스톱킹 피해자 보호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20여 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톱킹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스톱킹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살해되었던 일련의 사건들은 가해자 처벌이나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규정된 응급조치·긴급조치·잠정조치가 피해자 보호를 담보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팀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팀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